

재택근무 확대, 회식·출장은 금지... 국내 기업 '방역 고삐'

대면회의·교육·행사 등 중단하고 시차출퇴근제, 자체백신 등 진행

LG전자, 재택근무 축소 계획 선회 재택 비중 확대하고 방역에 만전 SK, 필수인력 제외 100% 재택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적용했다. 국내 기업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재택근무를 확대 적용하는 등 지난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조기업들은 사업장 운항을 중단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는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하고 출장 등을 금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사내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방문을 삼가고, 만약 방문하게 되면 사업장 복귀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10인 이하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허용하던 대면회의와 교육·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회식도 금지했다.

LG전자는 국내의 출장부터 외부 미팅, 집합교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앞서 이달부터 재택근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던 LG전자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근무 비중을 기존 40%에서 지난 8일부터 50%로 상향 조정했다.

SK그룹은 4단계 격상에 따라 지주사인 SK(주)와 SK이노베이션 등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100% 재택근무 체제

로 전환했다. 한화그룹 역시 전 계열사에 대해 재택근무 가능 부서에 한해 50%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3분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이날 공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정부가 이달 초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했음에도 기존 방역 지침을 고수해왔다. 현재 사무직의 50%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출장 제한, 회식 자제, 외부인 출입 금지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계

속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도 재택근무 비율을 50%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타이어 업계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출장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30% 수준에서 운영되던 재택근무 비율을 30~50%로 높였다. 금호타이어 역시 재택근무를 50% 수준에서 시행하고,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재택근무 비중을 종전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강

화한다. 시차출퇴근제(오전 7~10시)와 국내 출장 전면 금지, 회의·집합교육 10인 미만 허용 등의 방침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한다.

철강업계는 현장 폐쇄만큼은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국내 철강사 중 처음으로 당진제철소 주재 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자체 진행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스코도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근무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택근무 인원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또 초등돌봄 재택근무 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 제한, 회식중단, 행사금지 등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재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시장이 위축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당국, 코로나 대출연장·유예 '고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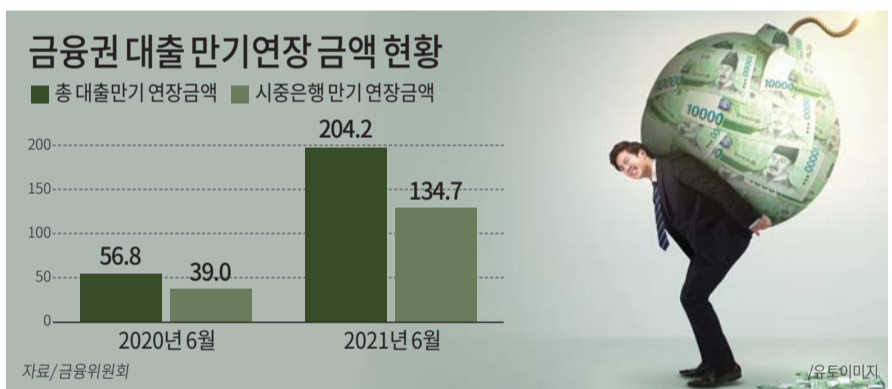
두 차례 재연장 거쳐 9월 종료 앞둔 차등적 연착륙 방안 목소리 나와 자금부담 리스크 우려 반발도 "확산세 지켜본 후 결정 내릴 것"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오는 9월 이자유예 종료·연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 연장여부를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재연장을 거쳤다. 통상 금융위는 조치 연장·종료여부를 두달 전에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표로만 보면 정상 경제로 볼 수 있지만 지난 일주일 간 코로나 상황이 급변되면서 만기연장 중단 시 타격받을 수 있는 차주 규모나 연체발생 규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며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지난달 25일 기준 204조 2000억원(83만건)이다. 시중은행 134조 7000억원(53만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고 정책금융기관이 68조 1000억원(25만건), 제2금융권 1조 4000억원(4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대출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자산 건전성 약화에 대비해 연착륙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금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34조에 가까운 돈을 1년 6개월 이상 대출해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만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 부실화를 낮추기 위해 차등적으로 연착륙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착륙방안은 코로나19로 대출만기 연장을 한 차주가 상환방법과 기간을 결정해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이다. 기존 만기시점까지 월상환액을 늘려 상환하는 방법과 만기시점을 늘려 월 상환액을 기존처럼 유지하는 방법 등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차주의 상환을 감안해 다양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부실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연착륙방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작정 연착륙방안을 시행할 경우 차주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 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조사대상인 상장·비상장 기업 2520곳 가운데 39.7%로 전년(35.1%) 대비 4.6%포인트(p)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 1배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연착륙방안에 대출만기 재연장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자금부담이 줄어듦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업황은 제조업 등 다른 업권에 비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나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산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도권 학교, 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

경기는 오늘, 서울은 14일부터 시행 '매일등교' 고3·초1~2도 다시 원격 당초 '2학기 전면등교' 계획 불투명

12일부터 경기지역 모든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서울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이지만, 학교는 학사 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밝힌 원격수업 전환 시작일인 14일보다 이를 앞당겨 12일부터 전환한다.

이에 따라 매일 등교했던 고3과 초등 1~2학년도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시 원격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일부 취약계층만 학교에 나가 '소규모 대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은 방학 전까지 최대 2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 전면 원격에도 학원은 문 연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좌석은 두 칸씩 띄우거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기숙학원은 운영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입소 전 2일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소 후 1주간 1인실을 사용하는 수칙을 지킨다면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칸막이가 없는 곳은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한다.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등 운동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위실 운영을 금지한다.

◆2학기, 전면등교 가능성 ↓

이대로라면 2학기 전면등교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시행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충철 교육부 차관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 현재 원칙을 유지하겠다"라며 "모든 국민이 자율적 책임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 또한 예정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면 2학기 전면 등교라는 목표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전망을 하면서, 2학기 '전면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르면 8월 셋째 주인 2학기 개학 때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꺾여 2단계 수준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산 추이가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ihj@